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인용」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 ○○. ○○.부터 인천광역시 ○○○구 ○○○대로○○○번길 ○○○, ○○○○○○○○○타워 판매시설○○동 ○○○층 ○○○○○호, ○○○○○호(○○동)에서 ‘○○○○○○○○ ○○○점’ (이하 ‘이 사건 업소’ 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 ○○. ○○. 청소년 ○○○(○○세)에게 주류(소주 ○병 등 총 ○○,○○○원 상당)를 제공하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인천○○경찰서에 적발되었다.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고 20○○. ○○. ○○.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개월 감음 과징금 ○,○○○만 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① 손님 ○명 중 ○명은 성인임을 확인하였고 ○명이 주민등록증을 미소지하였으나 ○명과 친구라고 주장하여 주류를 판매하게 된 점, ②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려는 고의성이 없었으며 이 사건 손님들이 무전취식을 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한 점, ③ 채무상환과 코로나 19 사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직원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의도성 여부를 불문하고 청구인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가 이루어져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며, 인천○○경찰서 수사결과 등을 보더라도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해지는 제재이기 때문에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또한 오늘날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식품접객업자의 청소년 관련 법규위반행위는 엄격하게 다스려져야 하며, 영업자의 준법정신 고양과 법질서 확립 등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나. 사실관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은 20○○. ○○. ○○부터 인천광역시 ○○구 ○○대로○○○번길

○○, ○○○○○○○○○타워 판매시설○동 ○층 ○○○○호, ○○○○호(○○동)에서 ‘○○○○○○○○○ ○○점’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2) 청구인은 20○○. ○○. ○○. 청소년 ○○○(○○세)에게 주류(소주 ○병 등 총 ○○,○○○원 상당)를 제공하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인천○○경찰서에 적발되었고 20○○. ○○. ○○. 인천○○경찰서장은 이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3) 위 2)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 ○○. ○○.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는 다음과 같다.

I. 피의자 : ○○○○

II. 죄명 : 청소년보호법위반

III. 주문 :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IV.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운영하는 ○집에서 성인과 함께 온 청소년의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술을 판매한 것으로 사안이 경미한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4) 위 2)의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 ○○. ○○.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과징금으로 갈음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5)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개월 갈음 과징금 ○,○○○만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판 단

1)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는 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을 보면 II.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라목에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1]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I.일반기준 제15호바목에 의하면 해당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 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가)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연령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일 청구인은 청소년 이○○(○○세)에게 연령확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를 판매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이 사건 위반사실이 인정된다.

나) 청구인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4항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약물등을 판매 · 대여 · 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같이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자에게 부여된 연령 확인 의무는 단순한 증표제시 요청, 손님 외모에 의한 연령 추측 등과 같은 소극적 확인 의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통해 본인 여부가 가능한 신분증 확인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할 것이나, 인천지방법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청소년의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해 보이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며(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기소유예’라 함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일 뿐 청구인의 종업원이 면책이 되었다거나 위반사실이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닌바,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제공하다 적발되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다만, 인천지방법검찰청 불기소 결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청소년이 성인을 동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동종 위반전력이 없는 점,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성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크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